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2호

발행일: 2026. 2. 13. (금)

제431회 국회(임시회, 2026. 1. 12. ~ 2026. 1.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나. 가상자산시장 제도 개선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1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모두 9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경력,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1회 국회의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법제사법위원회(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등 12인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정무위원회(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2	정무위원회(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3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3인
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5인
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 등 15인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등 12인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 등 11인
2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등 11인
22	교육위원회(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의원 등 10인
3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등 10인
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3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3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의원 등 11인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8	외교통일위원회(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의원 등 12인
39		6·25 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 등 10인
40	국방위원회(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1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등 10인
4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등 11인
4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4	행정안전위원회(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5	행정안전위원회(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6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3인
57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0인
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 등 15인
59	문화체육관광위원회(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6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6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
6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66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등 24인
6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3인
6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등 10인
6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7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4인
7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1인
7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7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7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7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8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등 11인
8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등 24인
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6인
85	국토교통위원회(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등 21인
9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가상 자산시장 제도 개선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개요

미·중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 확산 등으로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구조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핵심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국방, 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전반의 기반 기술로 기능하고 있어, 산업정책과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통해 개별적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입법정책브리핑 제2025-2호, 제2023-3호, 제2023-1호 등 참조),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게 하며, 산업기반 시설 조성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하고,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자 함.	2026-01-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산업부)

□ 과제목표

-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 '30년 목표: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 주요내용

-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 (공급망 강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 확충
 -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으뜸기업 200개 육성('30)
 -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 확대
 -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주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
- (기술혁신·생산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 강화
 -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
 - 반도체 레거시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위탁생산시설 장비구축 등 생산 인프라 보강
- (구조혁신 지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
 - 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
 -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 추진
- (상생협력 확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혁신
 -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 반도체 실증랩,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 업종별 성공사례 창출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1 국가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α”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다각화

1 K-반도체 세계 2강(반도체 제조 + 팹리스) 도약

-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7~'31년) 수립('26.4분기)
 - * (구성)위원장(대통령)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역할)반도체산업 주요 정책 심의·의결
-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 지원
 - * 국민성장펀드 통해 반도체 분야 42조원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조성시 인·허가 타임아웃제 적용('반도체특별법: 제정),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확대(제 6개→30년 목표 10개) 등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부, 2025. 12. 17.)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국내 **첨단 마더팩토리**, **해외 양산**을 통한 **세계 1등 초격차 확보**

○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분야 **수요연계 AI 반도체(NPU)** 개발
- 차량용 **MCU**, 전력반도체 등 **미들텍 반도체 우선구매** 등 국산화
↳ Micro Control Unit
-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 설립 등 국내 팹리스 규모 10배 확장
- 반도체 설계인력 역량 제고 위한 **‘Arm 스쿨’** 설립(’26~’30, 1,400명)

○ **「반도체 특별법」 기반, 전용 특별회계 신설(’27)**

출처: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2025. 2.

구자근 의원안: 반도체산업 지원·육성 체계의 구축 등 2025. 2.

이연주, 정진욱 의원안: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2024. 11.

김태년, 박수영, 송석준 의원안: 컨트롤 타워의 설치 등 2024. 9.

고동진 의원안: 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 2024. 8.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구축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보고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추가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6. 2. 4.

2026년 ‘팍스 실리카(Pax Silica)’의 도래는 핵심광물이 국가 안보의 절대 상수로 부상하며 글로벌 자원 전쟁이 생존을 위한 각축전으로 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 핵심광물 포고령(Proclamation)’ 발표, 중국의 對日 수출통제 등 열강의 자원 무기화가 노골화되는 현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공급망 내재화’와 ‘핵

심광물 안보'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 「대외무역법」 보완 등 핵심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3. 12. 13.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유망 산업분야와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23-06 2023. 12. 5.

- 최근 미중 패권경쟁 및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제조기반과 미래 기술경쟁력 선취를 위한 공격적·경쟁적 자원 투입
- 국제 산업 지형 및 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 과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1) 산업 발전 도모
 - 국내 주요 기업들은 세계 DRAM 시장의 70%, NAND 시장 50%가량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 및 양산 경쟁력을 보유
 -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가치사슬 구성 주요국(미국, 유럽, 대만, 일본, 중국) 대비 낮은 점유율(3.3%) 및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 대기업 ICT 판로 확보 소자에 편중된 매출 구조
- 美 「반도체와 과학법(CHIPS & Science Act of 2022)」 및 유럽 반도체지원법 통과로 동북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서방 국가 주요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시설투자 본격화
 - 美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 통과에 따라 '20. 5 ~ '23. 1 기간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국내 시설투자 금액이 1,866억 달러이며, 향후 3,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나. 가상자산시장 제도 개선

개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자금세탁, 불법거래, 투자자 피해 사례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보다 엄격한 감독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6-1호 **토큰증권 제도화** 이슈 참조). 특히 기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내부통제에 있어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 중심의 심사에 그쳐, 실제 지배력을 가진 대주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의 근거 규정을 두는 등 내용의 입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026-01-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금융위)

□ 과제목표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5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5. 1. 8.)

□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 추진

*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서 세부방안 검토 및 마련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특금법 개정)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

* 예) 밌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

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누리집

참고 자료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2024. 11.

강민국 의원안: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024. 11.

강민국 의원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2024. 11.

이정문 의원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위반 법률의 범위 확대 2024. 8.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 : 제1차 연속국회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대주주 심사제 도입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22-3 2022. 12. 5.

- 암호자산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 증가 등 국내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 암호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암호자산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감독·감시 등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암호자산 규제 입법방향을 제시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0권 16호 2021. 8. 7.

현재 가상자산거래업체는 매매중개, 체결, 청산 및 결제, 예약,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들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담당할 때 가능한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거래업체와 고객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정보 거래, 자기자본 거래 등의 문제도 존재함. 따라서 인가/등록제의 시행, 자산 분리의무 부과, 약관 및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등 가상자산거래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0권 11호 2021. 5. 29.

- 가상자산시장은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하여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FATF 지침임
- 또한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법률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의 규칙제정권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음
-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감독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가상자산시장의 진실성(integrity),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상자산의 규제를 담당할 당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함
- 셋째,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에 따라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 규제감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급업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적임
- 넷째,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